

2020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20. 7. 11 시행) 총평

1. 출제 영역

문항	난이도	출제 영역	문항	난이도	출제 영역
1	하	1단원 정책 결정 모형	11	하	2단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2	하	3단원 헌법상 국가 기관	12	중	3단원 문화의 변동
3	중	2단원 지방자치제도	13	중	4단원 사회 제도의 유형
4	하	3단원 국회의 권한	14	중	1단원 자료 수집 방법
5	중	1단원 민주주의의 발전	15	중	4단원 사회 계층 구조
6	하	6단원 국제법의 법원(法院)	16	하	4단원 인플레이션의 효과
7	중	3단원 위헌 법률 심판	17	하	3단원 수요와 공급의 변동
8	중	4단원 이혼의 유형	18	하	2단원 정부의 재정 정책(조세)
9	중	5단원 형사 절차	19	중	4단원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10	중	5단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절차	20	중	3단원 가격 탄력성

→ 1번~10번 법과 정치(정치와 법) (10문제), 11번~15번 사회문화(5문제), 16번~20번 경제(5문제)

2. 총평

법과 정치(정치와 법)은 전체적으로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부속 법령이 다소 생소한 것이 있을지 모르나 제도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조문을 모르더라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처럼 헌법 조문으로만 한 개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동안 국가직에서 자주 출제되던 선거 관련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지방직·서울시 때의 시험과 지방자치제도만 빼고는 중복되는 주제나 쟁점이 없을 정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단순 암기보다 제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위헌 법률 심판과 형사 절차 문제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문이 있어서 여기서 오답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문화는 전통적으로 출제되던 중요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5문제 모두 단순 선지 문제가 아닌 자료 제시 후 자료 분석 후 지문을 푸는 형식으로 수능형의 문제 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시문이 수능 정도로 긴 문제도 있었지만 답을 찾기에는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지방직·서울시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료 수집 방법’, ‘사회 계층’ 문제는 이번에도 출제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나 자료 해석 문제가 없어서 평이하게 풀 수 있었을 듯 하나, 14번이 다소 낯설 수 있는 지문이 있어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부족한 수험생들에게는 긴 지문의 문제가 부담으로 느껴졌을 듯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 듯 합니다.

경제는 보통 경제 과목에 한 두문제는 어렵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세 과목 중 경제가 가장 평이한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주요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고, 답을 고르기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19번이 다소 새로운 유형 방식으로 출제되어 당황한 수험생이 다소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기본 개념 숙지와 기출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하신 수험생들이라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 지방직과 비슷한 듯 합니다. 다만 타과목이 지난 지방직보다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시간의 부족 등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보다는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습과 반복만이 시간의 부족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친 본 수험생분들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재투입되는 환류 과정을 의미한다.

- 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 ②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 ③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 ④ 향리형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 (가)가 활성화된다.

A: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
B: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하는 기관

- ① A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A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 ③ B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 ④ B는 사법부 소속의 독립성을 갖는 헌법 기관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1단원 정책 결정 모형

【해설】

(가)는 투입, (나)는 산출이 들어간다.

- ③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때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진다. 정치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출에 해당한다.
- ②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한다.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닌 정치의 주체에 해당한다.
- ④ 향리형 정치문화의 경우 전통적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치 문화이다. 향리형 정치문화의 경우 투입과 산출이 모두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형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투입이 산출보다 활성화된다. 반면, 권위적 국가에서는 투입보다 산출이 활성화된다.

【정답】 ③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3단원 헌법상 국가 기관

【해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회의이고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따라서 A는 대통령, B는 감사원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무위원이다.
- ③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 ④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행정부 소속 기관이다. 다만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②

문 2. 헌법상의 국가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3.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2단원 지방자치제도

【해설】

- ④ 조례 공포권과 재의 요구권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과 광역·기초 단체장은 모두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② 지방선거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것과 달리 주민투표나 감사 청구는 현재에도 만 19세 이상임을 유의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역 주민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선거권이 인정된다. 단,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정답】 ④

문 4.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국회는 국가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권을 가진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3단원 국회의 권한

【해설】

-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국정감사와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때 실시하는 국정조사가 모두 인정된다.

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헌법 제111조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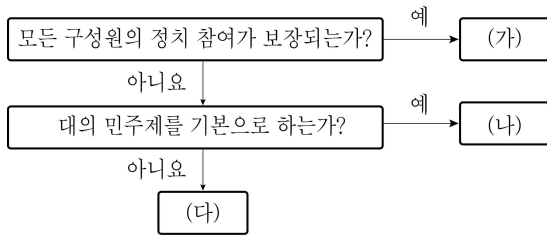
제114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국회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소극적 수권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④

문 5.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 ① (가)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이다.
- ② (나)의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다.
- ③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 ④ (가), (다)의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된 것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1단원 민주주의의 발전
【해설】

	정치 참여 범위 변화
고대	자유인인 성년 남자 (여자, 노예, 외국인 제외)
근대	재산이 많은 성년 남자 (여자, 노동자 제외)
현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성인 남녀)

우선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가)는 현대 민주정치이고,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이다. 그리고 나머지 (나)는 근대 민주정치이다.

② 중세 사회의 신분제 사회가 동요되고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은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천부인권사상이다. 이를 통해 근대 사회가 수립되고, 근대 사회를 지탱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형태는 (다)이다.
- ③ 근대 사회는 재산이 많은 성년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통하여 선거권이 확대되었고, 20세기에 와서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 ④ 근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정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현대에 와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되었다.

【정답】 ②

문 6. 국제법의 법원(法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나)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교토 의정서

- ① (가)는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 ②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 ③ (다)는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 (가), (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6단원 국제법의 법원(法院)
【해설】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법의 일반 원칙, (다)는 조약이다.

② 법의 일반 원칙이란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국제 분쟁과 관련한 재판에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국제 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은 조약이고,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원으로 인정된 것으로 묵시적 합의에 기인한다.
- ③ 국제 사회의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은 국제 관습법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하는 등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요하지만,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 ①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일원론으로 보아 별도의 변형 절차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②

문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원은 □□법 일부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A에 (㉠)을 제청하였다.
-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은 1심 재판 중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을 신청한 후, 기각되자 A에 (㉢)을 청구하였다.

- ① A의 중독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 ②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③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 ④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권한쟁의심판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3단원 위헌 법률 심판

【해설】

법원이 법률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A에 제청한 것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따라서 A는 헌법 재판소, ㉠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재판 계속 중 재판 당사자인 갑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에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고, ㉢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③ 재판 당사자인 갑은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헌법 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 때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은 위헌 법률 심판이고, ㉡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다.

【정답】 ③

문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상의 부부이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갑은 을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을에게 ㉠협의상 이혼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을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갑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

- ① ㉠의 효력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즉시 발생한다.
- ② ㉠과 달리 ㉡에서만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 ㉡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④ ㉡은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4단원 이혼의 유형

【해설】

- ③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 확인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두 이혼 모두 법원을 거쳐야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 주민 센터나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당사자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은 허용되지 않지만(판례), 재판 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 ④ 법률로 정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이고,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③

문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갑을 ㉠구속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갑은 기소되었다. 그 이후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되었고,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①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 ③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 ④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5단원 형사 절차

【해설】

- ③ 국민 참여 재판은 제1심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중한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국민 참여 재판은 1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갑은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로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즉,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의 권한이다.
- ② 갑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므로 피고인 신분이다. 따라서 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은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석 신청 허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기소되기 전 피의자 신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④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즉,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어 형 선고의 효과는 유지되고,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된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③

문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A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갑과 을은 각각 B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B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고 을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보 기> —

- ㄱ. 갑, 을 모두 지방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ㄴ. 을은 B지방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A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ㄷ. B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A회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ㄹ. A회사의 노동조합은 갑과 을의 해고에 대해 B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출제 단위 및 영역】 법과정치 5단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

【해설】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므로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을은 잦은 결근으로 해고를 당했으므로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부당 해고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 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처도 되지만, 곧바로 민사 소송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ㄷ.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오답 피하기】

- ㄴ. 당사자는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을 할 경우 중앙 노동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

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노동 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해고만이 문제되는 을의 사안의 경우 노동 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문 11.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현재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① 갑의 입장은 집단의 속성을 개인 속성의 총합과 같다고 본다.
- ② 갑의 입장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면서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주장과 일치한다.
- ③ 을의 입장은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 ④ 을의 입장은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2단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해설】

갑은 사회 명목론, 을은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다.

- ①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보지 않고 단순한 개인들의 총합으로 본다.

【오답 피하기】

- ② 사회 명목론에서는 개인을 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을 둔 입장은 사회 실재론이다.
- ③ 사회 실재론에서는 사회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보고 개인들은 사회에 구속된다고 본다. 반면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가 개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 ④ 사회를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계약설의 입장이고 사회 계약설에 토대를 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정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문 12.~문 13.]

문 12.

-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지는 광부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바지 상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청바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으로부터 소개된 후, 생맥주, 통기타 등과 어우러지면서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가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옷이 되었다.
-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 서양 문물이 전해졌는데, 그중에는 종교도 있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아프리카 고유의 토속신앙이 사라지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로 종교가 대체되기도 하였다.

— <보 기> —

- ㄱ. ㉠은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발견에 해당한다.
- ㄴ. ㉡은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 ㄷ. ㉢은 간접전파에 해당한다.
- ㄹ. ㉣은 문화변동의 결과 중 문화동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3단원 문화의 변동

【해설】

- ㄴ. 청바지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직접전파에 해당하고, 직접전파는 외재적 변동에 해당한다.
- ㄹ. 아프리카 고유의 토속신앙이 사라졌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문화동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ㄱ.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던 것을 바탕으로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발견은 이미 존재하였으나 알아내지 못했던 것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은 청바지를 새롭게 발명한 것이다.
- ㄷ. 선교사들이 종교를 전파한 것은 직접전파에 해당한다.

【정답】 ②

문 1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 (㉡),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장애를 얻거나 또는 사망할 경우, 본인의 치료비와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보 기>

- ㄱ.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 ㄴ. ㉠의 수혜자는 ㉡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ㄷ. 기초연금제도는 ㉡에 해당한다.
- ㄹ. ㉡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ㄹ
-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4단원 사회 제도의 유형

【해설】

- ㉠은 공공부조, ㉡은 사회보험, ㉢은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한다.
- 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중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대상이 된 사람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ㄹ. ㉡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모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재원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사회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두 제도 모두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 ㄷ.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정답】 ②

문 14. 자료수집 방법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

비교 항목	비교 결과
자료수집 방법의 구조화·표준화 정도	A<C
조사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파악 용이성 정도	B, C<A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 탐구 용이성 정도	A, C<B

※ 낮음 또는 작음<높음 또는 큼

- ① A는 조사대상자와 연구자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 ② B는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③ C는 양적 자료보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 ④ A와 달리 C는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법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 1단원 자료 수집 방법

【해설】

조사대상자들의 상호작용 파악이 가장 용이한 것은 참여 관찰법이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화 현상 탐구 용이성 정도가 큰 것은 문헌 연구법이다. 문헌 연구법은 아주 오래전 기록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관찰법보다 자료 수집 방법의 구조화·표준화 정도가 더 큰 것은 질문지법이다. 따라서 A는 참여 관찰법, B는 문헌 연구법, C는 질문지법이다.

▶ 자료 수집의 구조화·표준화 정도

실험법>질문지법>면접법>참여 관찰법

- ② 문헌 연구법은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수집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배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참여 관찰법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유아나 언어가 다른 집단에게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질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 ④ 질문지법은 문맹자에 대해서는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참여 관찰법의 경우 문맹자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집단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②

문 15. 다음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

- 2005년: 상층 인구보다 중층 인구는 4배 많고, 하층 인구는 상층 인구보다 5배 많다.
- 2010년: 2005년에 비해 상층 인구는 2배 증가했고, 하층 인구는 1/2로 감소하였다.
- 2015년: 2005년에 비해 중층 인구는 1/2로 감소했고, 하층 인구는 동일하다.

- ①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 ②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 ③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 ④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이다.

문 16.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 ㄴ. 환율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 ㄷ. 고정된 임금을 받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 ㄹ.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비해 불리해진다.

- ① $\neg$, L ② $\neg$, $\exists$
③ L, $\sqsubset$ ④ $\sqsubset$, $\exists$

【출제 단위 및 영역】 사회문화법 4단원 사회 계층 구조

【해설】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2010	2015
상층	a	2a	3a
중층	4a	5.5a	2a
하층	5a	2.5a	5a
총인구(=동일)	10a	10a	10a
계층구조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 ④ 2010년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로서 피라미드형과 모래시계형보다 안정적인 계층구조를 나타낸다.

【오답 피하기】

- ① 2005년은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이고, 2015년은 모래시계형 계층구조이다.
- ② 2005년 하층 인구는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 ($5a=a+4a$)
- ③ 2010년의 상층 인구($2a$)는 2015년의 상층인구($3a$)보다 작다.

【정답】 ④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4단원 인플레이션의 효과

【해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이다.

▶ 인플레이션의 효과

- ㉠ **불리한 경제 주체** : 화폐 자산 소유자, 채권자, 봉급·연금 생활자, 수출업자 등
- ㉡ **유리한 경제 주체** : 실물 자산 소유자, 채무자, 자영업자, 수입업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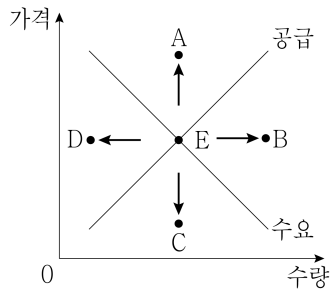
- 나.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므로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 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즉, 고정된 임금을 받는 가계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상승하였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오답 피하기】

- ㄱ. 인플레이션으로 채권자는 불리해지고, 채무자는 유리해진다.
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유리해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므로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불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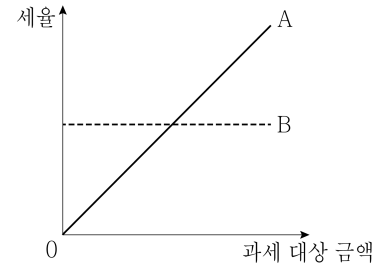
【정답】 ③

문 17. 그림은 X재 시장의 균형점 E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E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 ②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
- ③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 ④ X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E는 D로 이동할 수 있다.

문 18.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가 가치세에는 주로 A가 적용된다.
- ②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는 주로 B가 적용된다.
- ③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 ④ 소득 재분배 효과는 B에서보다 A에서 크게 나타난다.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3단원 수요와 공급의 변동

【해설】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균형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번이다.

- ①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E는 A로 이동할 수 있다.
⇒ 공급 증가 / 수요 증가 ⇒ B로 이동
- ②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X재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E는 B로 이동할 수 있다.(편저 주:정상재임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이러한 말이 없어 아쉬움!!)
⇒ 공급 증가 / 수요 증가 ⇒ B로 이동
- ③ X재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X재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E는 C로 이동할 수 있다.
⇒ 공급 증가 / 수요 증가 ⇒ B로 이동
- ④ X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E는 D로 이동할 수 있다.
⇒ 공급 감소 / 수요 증가 ⇒ A로 이동

【정답】 ②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2단원 정부의 재정 정책(조세)

【해설】

A는 과세 대상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므로 누진세이고, B는 과세 대상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세율이 일정하므로 비례세이다.

- ④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가 비례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오답 피하기】

- ① 부가 가치세에는 간접세로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 ②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직접세이므로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③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을,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④

문 19. 표는 총수요나 총공급의 변동이 국민 경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또한 A, B는 총수요, 총공급 중 하나이다)

구분	균형 물가 수준	균형 실질 GDP
A만 증가	상승	㉠
B만 감소	상승	㉡
(가)	하락	증가

- ① A는 총공급, B는 총수요이다.
- ② ㉠과 ㉡은 모두 '증가'이다.
- ③ (가)에는 'B만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정부 지출의 증가는 (가)의 원인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4단원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해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보면 균형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는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A는 총수요, B는 총공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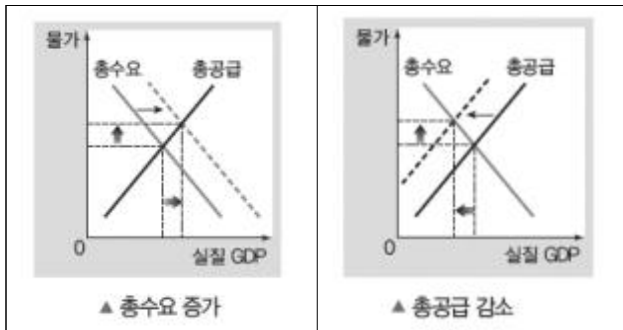
- ③ 균형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균형 실질 GDP는 증가하기 위해서는 총공급만 증가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총공급 증가

【오답 피하기】

- ① A는 총수요, B는 총공급이다.
- ② 총수요만 증가할 경우 균형 물가는 상승하고 균형 실질 GDP는 증가한다. 반면 총공급만 감소할 경우 균형 물가는 상승하지만, 균형 실질 GDP는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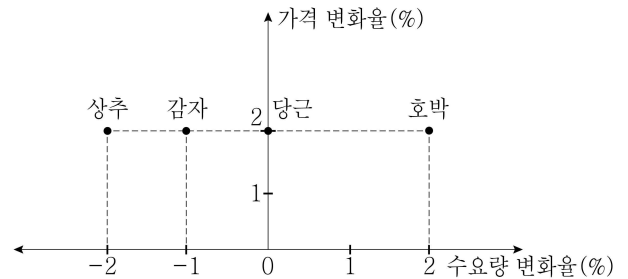
▲ 총수요 증가

▲ 총공급 감소

- ④ 총수요=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순수출로 이루어지므로 정부 지출의 증가는 총수요 증가의 요인이 된다. ③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총공급만 증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부 지출의 증가가 (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문 20. 그림은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자와 호박의 판매수입은 각각 증가하였다.
- ② 당근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 ③ 상추 판매수입은 감소하고, 당근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 ④ 상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출제 단위 및 영역】 경제 3단원 가격 탄력성

【해설】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추	감자	당근	호박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비탄력적	수요법칙의 예외

- ① 판매수입은 $\text{가격} \times \text{판매량(수요량)}$ 이다. 감자의 경우 비탄력적인 재화이므로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 더 작은 비율로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또한 호박은 가격이 2% 상승했음에도 수요량도 2% 증가하였으므로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오답 피하기】

- ② 당근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 ③ 상추는 단위 탄력적이므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판매수입은 일정하고, 당근은 완전비탄력적이므로 판매량은 일정하다.
- ④ 상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정답】 ①